

# 이재명 '국정 안정 협의체' 제안... "한덕수 탄핵 안한다"

사법리스크 질문에 "기소 자체가 정치적...상식에 부합 안해"  
정부 "국정 안정 위해 국회와 협력할 준비돼 있다" 밝혀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이 여당처럼 행동해 거부"

'12·3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데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도 "여야 포함 국회와 협력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며 말했다.

또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담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

요하다"며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한민국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의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 등 '사법리스크'가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물음이 재차 나오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저 역시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여당이던 것처럼 행동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마치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수사·탄핵 리스크 안고 출발

상설특검 수사 대상·경찰 조사  
최소한 권한 행사로 '관리 모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

로 전환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괄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례에 따라 집무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가 출발부터 위태로운 형국이다.

특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고건·황교안 대행 체제 때와 견주어 윤석열의 폭도 현저히 좁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소극적인 행정권·인사권 행사를 통해 '관리 모드'의 국정 운영에 나설 공산이 크다.

총리실 측은 "권한 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권한 정지...경호·의전 유지 관저 머물 듯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회에서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됐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

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안 가결 후 가급적 외부노출을 삼가면서 관저에서 두문불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5493만 3000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윤석열 탄핵안 가결 후 담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께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속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